
「2021-제8호(Vol. 16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9. 6.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 • 코로나시대, 사고의 전환과 방역 친화적 경제로의 이행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2. 재정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자 예·결산서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4. 정책 및 연구 (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제적 성과 연구 •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강원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68조 4,844억원, 19% 확대 편성 •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1. 경제

출처

■ 2021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 세계경제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으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는 상이한 모습임.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국내 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지만,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수는 2021년 20만명, 2022년 24만명으로, 향후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경제 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1%, 2022년 중 1.5%로 전망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중 각각 820억 달러와 700억 달러로 전망됨.

[바로가기](#)

■ 코로나시대, 사고의 전환과 방역 친화적 경제로의 이행

한국금융연구원

- 백신의 개발과 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장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코로나시대에 진입함.
- 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달성 중심의 경제 운용방식은 방역지침을 완화하려는 유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개개인의 방역활동이 경제성장률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면영업 중심 업종들의 경우 비대면으로의 전환이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후적 금전적 보상 대신 사전적으로 방역 친화적인 영업환경으로의 전환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백신에 대한 과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국가는 거듭되는 재확산으로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가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이일대로(以逸待勞)’의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 (재정총량)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규모는 478.8조원으로 전년 대비 5.7조원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대비 8.1조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지출 결산 규모는 549.9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64.9조원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대비 4.8조원이 미지출 되었음.
- (국가채무) 2020년말 기준 국가채무 잠정치는 846.9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7조원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와 동일한 규모임. GDP 대비 비율은 43.8%로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전망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추경예산 대비 $\Delta 0.1\%$ p 감소함.
- (총계 기준 결산) 2020회계연도 세입은 465.5조원, 세출은 453.8조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증가폭이 세출증가폭 보다 커 결산상잉여금 및 세계잉여금은 증가함.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19 결산 (A)	2020				전년대비 (C-A)
		본예산	추경예산 (B)	결산 (C)	추경대비 (C-B)	
세입(A)	402.0	427.1	460.0	465.5	5.5	63.5
세출(B)	397.3	434.9	462.8	453.8	$\Delta 9.0$	56.5
결산상잉여금(A-B)	4.7	-	-	11.7	11.7	7.0
세계잉여금	2.1	-	-	9.4	9.4	7.3

-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은 392.4조원으로서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대비 4.4조원 초과수납 되었고, 세외수입은 추경예산 대비 1.2조원 과소수납됨. 세출 규모는 385.2조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현액 390.4조원 대비 98.7% 집행됨. 세계잉여금은 5.7조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국가배상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 등에 활용됨.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73.1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3조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총 예산현액 72.4조원의 94.8%인 68.6조원을 지출하였고 세계잉여금은 3.6조원이 발생함.
-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68개 기금 전체의 수입 · 지출액은 788.9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167.4조원 증가하였으나, 수정계획보다는 0.4조원 적었음.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규모) 정부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재정적자 20조원 축소로 건전재정 회복기반을 마련함.

【 2021~2022년도 정부 예산 】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안
	본예산	2회 추경	
총수입(증가율)	482.6(0.2)	514.6(6.8)	548.8(6.7)
총지출(증가율)	558.0(8.9)	604.9(18.1)	604.4(8.3)
통합재정수지(GDP대비)	△75.4(△3.7)	△90.3(△4.4)	△55.6(△2.6)
국가채무(GDP대비)	956.0(47.3)	965.3(47.3)	1,068.3(50.2)

- (투자방향) 내년 예산안은 ①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②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③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 구조 대전환, ④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구성됨.

【 2022년 예산안 4대 중점 프로젝트(12개 항목) 】

구 분	예산액(조원)
(합 계)	254.3
(중점1,2)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114.8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83.4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3.5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4.5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3.4
(중점3)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53.8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33.7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6.2
미래 경제구도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2.0
탄소중립경제 선도	11.9
(중점4)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85.7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21.8
가족 행복·육아 친화 5+3 지원	6.6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4.7

- (중기 재정계획)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도약,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2023년 이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

【 '21~'25년 중기 재정총량 】 (단위: 조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총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 총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
(GDP대비,%)	(△3.7)	(△4.4)	(△2.6)	(△2.9)	(△3.0)	(△3.0)	-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
(GDP대비,%)	(47.3)	(47.3)	(50.2)	(53.1)	(56.1)	(58.8)	-

* '21년 추경예산 대비(본예산 대비 6.4%) / ** '21년 추경예산 대비(본예산 대비 7.9%)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CBO, 2021~2031년 재정전망 수정

- (개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21년 7월 2021~2031년까지의 중기 재정 및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함.
 - * 당초 CBO는 2021년 2월에 재정·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2021년 5월 18일 기준 제정된 법률 및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재정 및 경제전망을 재산정하여 수정 발표
- (정부수입 및 지출전망) 정부 수입은 2020년 GDP의 16.5%에서 2021년 17.2%로 증가하고, 2022~2031년에는 평균 GDP 대비 18%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 지출은 2021년 6.8조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 구호계획법 제정*에 따른 지출 증가에서 기인됨.
 - * 2021년 3월 통과된 「2021년 미국구호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등 정부 지출 증가
- (재정적자 전망)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3조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0년 재정적자보다는 약 1,300억 달러 감소한 규모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임. 2021년 이후 재정적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가 2025년 이후 증가하여 2022~2031년 누적 적자 12.1조 달러(연평균 1.2조 달러), GDP 대비 4.2%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채무 전망) 2020년 말 연방정부의 채무는 GDP의 100%인 21조 달러, 2021년 말에는 GDP의 103%인 23조 달러로 전망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 국회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2021.5.21.)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개정된 법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기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하여야 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상사업의 선정, 온실가스감축량 측정 방법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해외사례로는 ‘프랑스의 녹색예산’으로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 환경영향을 분석한 녹색예산서를 공개함.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21.8.10. 개정·시행)

법제처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퍼센트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21.8.10.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① 위기 전(前), ② 위기 초기(初期), ③ 위기 중(中), ④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함.

[바로가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8.24.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 ① 법 적용시한: '25년 → '45년
 -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명확화,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 구체화 등이며, 금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주)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폐특법 적용시한인 '45년까지 약 5조원(연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01~'20년 1.9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기(既) 조성)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21.8.31.)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음.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①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 ②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 ③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④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 마련 ⑤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 ⑥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음.

[!\[\]\(96cc62f861fdd6e50510c0224a756dff_img.jpg\) 바로가기](#)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1.8.11.~8.31.)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됨.
 -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됨.
 - *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②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③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임.

[!\[\]\(f95dab70c751fda7d824b8b03650f7aa_img.jpg\)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개요)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 확대, 역학조사 등을 통한 추적과 격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2021년 2월부터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함.
- (지원경과)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접종비를 전액 부담함.
- (재정소요 분석) ① 건강보험 수입 측면: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② 건강보험 지출 측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재정지원 등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재정현황) ① 2020년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7.9%, 4.1% 증가하였는데, 수입과 지출 모두 정부 전망치를 하회 ②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 증가율(7.9%)은 전년도(9.5%) 대비 소폭 하락 ③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건강보험 지출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으로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자가 감소하고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전년(9.2%)보다 증가율 둔화(4.1%) 등임.
-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은 호흡기 질환 등에서 의료이용의 감소 등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접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의 증가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바로가기](#)

■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서론)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앙정부 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분석·평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현황)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저출산 예산 및 해외사례 분석: 전문 참조
- (주요 쟁점 및 시사점) ① 핵심과제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및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가족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서론)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제반 비용 소요 및 부작용 등의 문제점,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제도 배경) 예산집행이 계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양상은 연말 예산집행 집중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으로도 발현되며, 불용의 발생으로 재정의 투입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이 수행하여야 하는 자원배분 및 경제안정화 등의 기능이 저하됨. 한편,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전망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함으로써 1년 단위의 국가재정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조기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등 재정지출 관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또한 동 제도가 재정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문제점) 조기집행은 균등집행에 비해 국고자금의 변동을 증폭시켜,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또한,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개선과제) 조기집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바로가기](#)

■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 (최근 동향) 가상자산 전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5월 2,930조원까지 급등하고 6월 절반 이하인 1,377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뒤 다시 최근 2천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위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부는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2021.3월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요건 구비 등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현재 상임위 계류 중임. 한편, 과세제도 정비 이전인 2019년,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분(803억원)을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중이며,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임.
- (가상자산 과세 이슈)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한 이후(2023년 또는 2024년)로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2.1.1.) 연기하는 규정,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규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제적 성과 연구

강원연구원

- (목적)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관광자원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결과) ①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118,727백만원(건설 93,518백만원, 연구개발 25,209백만원)이고, 지역 간은 120,337백만원(건설 94,535백만원, 연구개발 25,802백만원)으로, 전체 강원지역 생산유발효과는 239,064백만원임 ②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7,182백만원(건설 44,726백만원, 연구개발 12,456백만원)이고, 지역 간은 41,722백만원(건설 32,528백만원, 연구개발 9,194백만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8,904백만원임 ③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1,349명(건설 1,067명, 연구개발 282명)이고, 지역 간은 1,328명(건설 1,037명, 연구개발 291명)으로 강원지역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2,677명임.
- (정책적 시사점) ① 관광자원화사업의 후적 평가가 필요함 ②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의 투자가 필요함.

[바로가기](#)

■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글로벌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됨. 탄소중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목표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신규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탄소중립 추진 목표가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재원조달 계획과 녹색예산 운용 방안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주요국 재정동향) ① 2019년 말 EU 집행위가 유럽그린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재원으로는 EU 예산, 공정전환기금, 탄소배출권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임. ②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유럽그린딜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탄소비용부담의 구체화, 추가기금 마련 등을 포함)을 발표함. ③ 미국은 개도국 지원을 필두로 하여 기후금융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기후금융계획을 공개함 ④ OECD에서는 ‘녹색예산제도’를 ‘기후 및 환경 관련 녹색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지출과정에 연관된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수단들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 (시사점) ①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기금신설 및 탄소가격 강화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예산제도의 활용을 통해 재정투입을 녹색화함으로써 경제적 기회 마련과 함께 탄소중립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8.24.(화) 14: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타를 통과하였으며, 이날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 아울러,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임.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월 10일(화) 10:00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여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회로 진행된 지역별 예산협의회 중 마지막 행사로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재정현안인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함.
- 제2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년도 SOC 투자와 관련, 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②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③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는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산업·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도권 내 및 수도권·강원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철도·도로 등 확충,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별 디지털·그린전환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 강원도 현안사업 현황: 전문 참조

[바로가기](#)

■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기획재정부

- 정부는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의 국민참여예산 요구 사업 중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함.
- 이는 '21년 국민참여예산 사업(63개 사업, 총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로,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총20개, 781억원)을 차지함.
-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15개, 269억원)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총20개, 146억원), 법률구조(法律救助)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16개, 218억원)됨.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68조 4,844억원, 19% 확대 편성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2021년 대비 19.2%(+11조) 증가한 68조 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힘.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3조 3,67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① 지역활력 제고, ②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③ 디지털·정부혁신, ④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4조 7,413억원을 편성함.
-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바로가기](#)

■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교육부

-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76조 4,645억원 대비 12조 1,773억원(15.9%) 증가한 88조 6,418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힘.
-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70조 8,190억원 대비 12조 126억원(17.0%)이 증가한 82조 8,31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5조 6,455억원 대비 1,647억원(2.9%)이 증가한 5조 6,455억원이 편성됨.
-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②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지원, ③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④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⑤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됨.

[바로가기](#)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환경부

-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원 대비 6,102억원(6%) 증액된 10조 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원 대비 64억원(0.8%) 증액된 1조 133억원이며,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원 규모)에도 6,9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으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서,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하고자 함.

[바로가기](#)